



주간통일정세 2010-12(2010.03.15~03.2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10-12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정치 관련

- 北 관료들도 상황 심각하게 인식(3/16, 연합뉴스)
  - 중국 단둥(丹東)의 대북 무역상들은 16일 “최근 중국에 출장 오는 북한 관료들이 한결같이 ‘화폐 개혁 이후 경제 사정이 심각하다’고 토로한다”고 밝힘.
  - 단둥을 방문한 북한 관료는 “가장 큰 문제는 투기꾼들이 식량을 감추는 것”이라며 “이들이 숨겨놓고 풀지 않는 식량이 100만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고 무역상은 전함.
  
- 평양 행정구역 개편…작아졌다(3/16, 연합뉴스)
  - 일본의 대북인권단체 ‘구출하자 북한 민중, 긴급행동 네트워크’(RENK 대표 이영화)는 16일 북한이 최근 평양시 남쪽의 행정구역 4곳을 제외하고 서쪽의 행정구역 1곳을 포함해 결과적으로 평양 크기를 줄였다고 주장
  - 이 단체의 북한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말 평안남도 남포시 천리마구역을 평양에 편입하는 대신 평양시 승호구역 승호리, 중화군, 상원군, 강남군 등 4곳을 황해북도에 포함했다는 것임.
  
- 北박남기 총살당해…화폐개혁 책임(3/18, 연합뉴스; 자유북한방송)
  - 대북소식통은 18일 “북한 당국이 지난주 평양시 순안구역의 한 사격장에서 박 전 부장을 총살했다”며 “화폐개혁의 실패로 민심이 악화되고 김정은 후계체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자 모든 책임을 박 전 부장에게 씌워 반혁명분자로 처형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힘.
  - 박 전 부장의 경우 지난 1월 중순 중앙당 간부 전원이 모여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하는 ‘중앙당 대논쟁’ 자리에서 호된 비판을 받은 뒤 곧바로 구속돼 국가안전보위부의 취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자유북한방송’도 이날 “화폐개혁을 주도한 박남기 전 부장이 이달 초 모든 책임을 지고 총살됐다는 소문이 평양에서 나돌기 시작해 지방으로 퍼지고 있다”고 전함.
  
- 北, 내달 9일 최고인민회의 12기 2차회의(3/20, 조선중앙통신)
  -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회의가 내달 9일 평양에서 열린다고 보도
  - 작년 3월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대의원을 선출한 뒤 다음달 1차 회의





급세를 보임.

- 데일리NK관계자는 “북한의 장마당(시장)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작년 8월부터 평양, 신의주, 혜산 세 도시의 쌀값을 모니터해왔다”면서 “1월 말 400원선까지 오른 쌀값이 2월 초 장마당 통제가 풀리면서 한때 주춤했으나 신권 가치가 계속 떨어지면서 2월 하순부터 다시 급등했다”고 전함.

- 北, 외자유치 총동원령…룡악산 지도총국 신설(3/15, 연합뉴스)
  - 북한이 전방위적인 해외 투자자 모집을 지시하는 등 ‘외자 유치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중국 베이징과 단둥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최고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산하에 외자 유치 전담 기구인 ‘룡악산 지도총국’을 신설함.
  - 룡악산 지도총국 산하 집행기관인 ‘령봉경제연합회’가 신설, 이미 베이징 등에서 외자 유치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대북 소식통들은 전함.
- 北휴대전화사업자, 작년 매출 2천600만 달러(3/16,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집트 통신회사인 오라스콤은 ‘자사 75 대 북한 25’ 비율로 투자해 설립한 ‘고려링크’를 통해 2008년 12월 평양에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
  - 오라스콤의 ‘2009년 실적보고서’를 인용, 오라스콤이 북한에서 미화 2천 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도
  - 오라스콤은 “현재 153개 기지국을 이용해 평양, 평성, 안주, 개천, 남포, 사리원, 해주 7개 도시와 8개 공공도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조총련, 평양서 식당 운영 계획(3/17, 도쿄신문)
  -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생활 향상’ 방침에 호응, 평양에서 식당 3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
  - 이들은 자강도 희천(熙川)수력발전소 건설 근로자들에게 돼지고기 100t을 보내기 위해 전국 활동가 1인당 1만5천엔(약 19만원) 이상을 모을 예정이라고 전함.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해 3월과 9월에 이어 올해 1월4일에도 희천수력발전소를 시찰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英주재 北대사 “화폐개혁 혼란 수습됐다”(3/18, 연합뉴스)
  - 유럽연합(EU) 주재 대표부 대사를 겸임하는 자성남 주(駐) 영국 북한 대사는 18일 브뤼셀을 방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대표단 회의에 출석한 뒤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화폐개혁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 수습됐다”고 말함.



- 자 대사는 “화폐개혁은 인민(주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로서 초기의 혼란이 안정돼 잘 되고 있다”라고 강조
- 中 최초 北관광 전용열차 ‘예약 완료’(3/21, 연합뉴스)
  - 중국에서 처음 등장한 북한 관광 전용열차가 모집 정원을 모두 채우는 등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절강재선 등 현지언론들이 보도
  - 언론들은 저장(浙江)성 중국여행사가 다음 달 20일 첫 운행에 나서는 북한 관광 전용열차가 이미 모집 정원 600여 명을 채웠다고 소개
  - 이 북한 관광 전용 열차는 저장성 항저우(杭州)에서 출발, 허베이(河北)성 베이다이허(北戴河)와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 단둥(丹東) 등을 거쳐 북한 신의주까지 운행, 신의주에서는 북한 열차로 갈아타고 평양 등을 관광
- 北 ‘변영하는 평양’ 주제로 上海박람회 참가(3/21, 연합뉴스)
  - 리성운 북한(조선)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지난 18일 평양 주재 중국 신화통신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상하이 엑스포에 설치될 ‘조선관’ 건설 등 엑스포 참가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시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동포 매체인 조글로 미디어가 21일 보도
  - “강성대국 건설에 나선 조선 인민의 정신과 품모를 반영하면서 ‘공원 속의 도시 평양’의 면모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겠습니다.”라고 함.
- 北 휴대전화 사용자 12만명(3/21, 연합뉴스)
  - 2004년 발생한 용천역 폭발사고 이후 금지했던 일반인 휴대전화 서비스가 지난해 3월에 다시 허가됐으며 현재 사용인구가 12만명에 이른다고 홍콩 봉황망(鳳凰網)이 중경만보(重慶晚報)를 인용해 21일 보도

#### ■ 기타정세 (대내 경제)

- 北 전국 협동농장들, 모판만들기·흙보산·유기질복합비료 생산 본격화 및 알곡증산을 위한 우량종자확보사업 마무리 단계 돌입(3/16, 조선신보)
- 北 평양시 만경대피복공장, 1/4분기 생산계획 110% 초과 수행(3/16, 중방)
- 北 생산가능인구 비중, 10년후 南 추월(3/21, 연합뉴스)
  - 현대경제연구원, 21일 ‘남북한 인구구조의 특성’ 보고서에서 국제연합(UN)이 지난해 발표한 세계 인구 추계치를 분석
- 北 두만강개발 탈퇴는 라진 몸값 높이기(3/21, 연합뉴스)
  - 中 장런구이 중앙당교 교수 “北 개혁개방 의지 없어”



- 中지방정부, 라진항 도로 500억원 투자(3/21, 연합뉴스)
  - 안병민(교통연),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린성 성장이 북한을 방문해 3억위안을 직접 투자해 라진항 도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을 해주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힘.

#### 다. 군사 관련

- 北에선 137cm면 군대간다?…징병 키 제한 3cm↓(3/18, 자유북한방송)
  - 방송은 함경북도 청진시의 자사 통신원을 인용, 북한 인민무력부가 징병 업무를 전담하는 각 도·시·군의 군사동원부에 3월부터 징병 신체검사의 신장 제한을 140cm에서 137cm로 낮추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방송은 “1990년대 중,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영양결핍으로 아이들의 발육이 떨어져 현재는 중학교 졸업반 학생들의 평균 신장이 134cm까지 낮아졌다”면서 이유를 설명함.

#### 라. 사회·문화 관련

- 북한판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등장 눈길(3/16, 노동신문)
  - 노동신문 최근호(3.10)는 4면 절반을 할애해 새로 창작된 ‘우리 집사람’ 악보와 가사를 크게 실음.
  - 특히 올해 ‘3.8 국제부녀절’(국제여성의 날) 100주년을 맞아 이 노래를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음.
  - 1절은 군에서 제대하고 귀향한 봄날 꽃다발을 건네준 여인과 가정을 이룬 사연을, 2절은 힘들고 지칠 때 항상 곁에서 용기를 불어 넣어주고 손을 잡아 주는 고마움을, 3절에서는 아내와 평생 동반자로 일생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스와질란드, 北축구팀 공짜 전지훈련 거부(3/21, 연합뉴스)
  - 북한 월드컵 축구대표팀이 스와질란드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조건으로 190만 릴랑게니(한화 약 2억8천만원)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짐.
- 北매체도 ‘황사예보’ 반복…마스크 착용 당부(3/20,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
  - 북한 매체들도 올들어 최악의 황사가 발생한 20일 세 차례나 ‘황사예보’를 내보내며 노인과 어린이, 호흡기 질병 환자들의 주의를 당부
  - 황사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 북한은 올들어 지난 12일부터 황사예보를 하면서 황사가 호흡기, 눈에 미치는 영향 등을 TV의 ‘건강상식’ 코너를 통해 연이어 소개



- 北기자동맹, 獨방송에 협력 제안(3/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이 지난해 말 언론인 연수를 포함한 상호협력을 독일 방송측에 제안했다고 보도
  - 독일 국제방송인 '도이치벨레'가 운영하는 방송연수원의 헬무트 오상 아시아국장은 지난 18일 RFA에 "조선기자동맹의 국제부에서 우리 연수원에 '서로 협력하자'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북한측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언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힘.
- 북한-나이지리아 축구 평가전 갈등(3/20, 연합뉴스)
  -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북한 축구 대표팀이 다음달 14일 나이지리아 대표팀을 평양에 불러들여 평가전을 가지려 했으나 항공료 부담을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 기타정세 (대내 사회·문화)

- 지난 11월 소말리아 해적 피랍 북 선원 28명 4개월만에 풀려남(3/16, 로이터)
- 北, 각지 농촌들엿 봄밀, 보리심기 완료 보도(3/17, 중통)
- 北 국립교향악단, 새로운 교향곡들 창작 완성(3/16, 중통)
  - 관현악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 '돌파하라 최첨단', 교향시 '하 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등
- 조선기록과학영화촬영소, 과학영화 '영양포에 의한 무토양 잔디재배'와 '왕다래 나무를 많이 심자' 등 과학영화 제작(3/17, 중통)
- 국립교향악단 예술인들이 출연하는 '전시가요 음악회', 3.17 모란봉극장에서 진행(3/18, 중통)

#### 마. 6자회담(북핵)동향

- 潘 총장 "기회 되면 북한 방문할 것"(3/15, 연합뉴스)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노보스티 통신과 인터뷰도중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6자회담 재개만 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유엔은 북한에 원조를 보낼 준비가 돼 있고 북한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힘.
- 주영 북한대사, '6자회담 6월 중순 전 재개' 시사(3/19, 미국의 소리(VOV))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유럽연합 주재 대표부 대사 겸임)가 18일 브뤼셀을 방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초청으로 2시간 가량 대표단 회의에 참석
  -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의장인 크리스티안 엘러는 VOA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자성남 대사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평양 방문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이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함.

- 이어 “자 대사는 EU(유럽연합)의 대북 투자를 요청하면서, 북한 정부의 예산지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 정부가 과거에는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해왔지만 현재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경제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함.

#### ■ 기타정세 (6자회담(북핵))

- 스타인버그 “北과 폭넓은 이슈 논의 가능”(3/16, 연합뉴스)
- “미국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들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폭넓은 이슈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힘.

## 2. 대외정세

- 문타폰, 北 시장·텃밭 금지로 식량사정 악화(3/16, 연합뉴스)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은 15일 북한 당국이 지난해 장마당(시장)을 폐쇄하고 텃밭 등을 이용한 소규모 영농을 금지한 이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다며 이를 다시 허용할 것을 촉구
  -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자신의 최종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정권의 비민주적 특성이 일반 대중에게 ‘공포국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
  - 이에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최명남 참사는 발언을 통해 “특별보고관은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비호 두둔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동분서주하는 자에 불과하다”며 “모든 나라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보편적 정례검토(UPR) 제도가 가동되는 상황에서 특정한 나라를 골라서 문제시하는 특별보고관 제도가 병존하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다”고 주장
- 北김명일 총리, 류홍차이 中대사 접견(3/16, 연합뉴스; 신화통신)
  - 김영일 내각 총리가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류홍차이(劉洪才.54) 신임 중국 대사를 접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김 총리는 이양국 수교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활발했던 교류활동을 거론하면서 “조선(북한)은 조·중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함.
  - 이에 류 대사는 “중·조 전통우호관계는 역사가 유구하다”며 “지난해 수교 60주년 행사를 통해 양국이 공고한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알렸을 뿐더러 (중국과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줬다”고 화답함.

- 인권후진국의 주제넘은 훈시(3/18, 조선중앙통신)
  - 미국 발표 ‘2009년 세계인권실태연례보고서’의 ‘북한인권실태보고서’에 대해 북한은 “非法의 ‘인권재판관’ 행세 자체가 난폭한 국권침해·인권침해행위”라고 반론, “선군의 사회주의제도 강화, 고수”를 강조함.
- 北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예정(3/20, 조선중앙통신)
  -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의 가봉, 세네갈, 감비아를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 순방 날짜와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곧 방문하게 된다”고만 짧막하게 소개
  -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를 순방했고 2008년 3월에는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는 등 거의 해마다 아프리카 순방 외교에 나서고 있음.

#### ■ 기타정세 (대외 일반)

- 최수헌 레바논 駐在 北대사, 3.10 駐在國 공산당 중앙委 총비서 면담(3/15, 중방)
- 北 기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과 러시아 ‘차이코프스키명칭 모스크바 국립 음악대학’, 3.15 평양에서 ‘교류와 협조에 관한 합의서’ 조인(3/15, 중통)
- 국제위기그룹(ICG)은 15일 ‘엄격한 제재하에 놓인 북한’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갑작스런 균열 가능성을 주장함.(3/16, 연합뉴스)
- 김영일, 駐北 中대사 류홍차이(劉洪才, 54)와 만수대의사당에서 담화(3/16, 평방)
- 北-캄보디아 친선의원 대표단 회담,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3/17, 중통)
- 폴란드 외무성 대표단(단장 : 「쉬슈토프 슝스끼」국장), 3.18 귀국(3/18, 중방)
- 러시아 차이콥스키 명칭 모스크바 국립음악대학 대표단, 3.18 귀국(3/18, 중방)
- 룩셈부르크는 김정일 위원장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영국 신문 보도를 보인함.(3/19, 연합뉴스)

### 3. 대남정세

- 北, 비망록 내 키리졸브 비난…사상 처음(3/17, 조선중앙통신)
  -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사상 처음 ‘비망록’을 내 비난함.
  - 북한에서 비망록은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공개하고,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라는 뜻을 지님.



- 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적 대응타격’이 아니라 우리를 선제 공격해 점령하기 위한 전쟁 각본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요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유관측의 움직임이 다시금 활기를 띠려 할 때” 이같은 군사연습을 벌인 것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적인 처사라고 주장
- 관광재개 거부를 통해 드러난 반민족적 흉계(3/17, 노동신문)
  - 금강산, 개성 관광재개의 미해결된 데 대해 南 책임, ‘결단성 있는 조치’를 주장함.
  - 南 당국의 금강산, 개성관광사업 재개 반대 이유에 대해 신문은 “관광재개 사업이 북남관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게 하며 美주도하에 벌어지는 반공화국 ‘제재’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 있다”고 보도
  - 또한 南 당국이 금강산, 개성관광 재개를 계속 가로막을 경우 부득불 결단성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천명했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
- 北, “금강산 관광재개, 南당국 태도에 달려”(3/19, 조선중앙통신)
  - 금강산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19일 “관광길이 열리는가 마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힘.
  - 명승지도국은 이날 발표한 ‘금강산, 개성지구 관광재개를 가로막는 범죄적 책동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제목의 상보에서 “괴뢰보수패당이 끝까지 관광재개를 가로막을 경우 우리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 천명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갈 것”이라며 “남조선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주장
  - 북한 아태평화위는 앞서 18일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 지구내 남측 소유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하고 정부가 개성·금강산 관광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자와 계약, 금강산·개성 관광을 자국 및 해외에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힘.

#### ■ 기타정세 (대남)

- 남, 관세청…남북교역 규모 전년 동기대비 52.1% 증가 밝힘(3/17, 연합뉴스)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美, 6자예비회담 中제안에 동의” <요미우리>(3/21)

- 미국이 6자 본회담에 앞서 예비회담을 개최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일겠다는 방침을 중국에 전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1일 워싱턴발로 보도했음. 신문은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예비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할 생각이고, 예비회담의 틀 안에서 북·미 양자회담 개최 요구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앞서 중국은 2월 이후 외교 루트 등을 통해 미국에 예비회담을 개최하자고 타진했지만 미국 측은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조약 체결이나 제재 완화 등의 논의는 6자회담에서 논의하면 된다고 하며 북한의 6자회담 선 복귀를 요구해 평행선을 달려왔음.
- 중국이 “예비회담도 실질적으로는 본회담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해 미국 측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예비회담에서 북·미 양자 대화를 할 경우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6자회담 틀 밖에서 북·미 양자회담을 개최했다”고 설명할 수 있음.
- 미국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동의함으로써 북한에 예비회담 참가를 촉구하고, 향후 예비회담에서는 “제재 완화 논의를 본회담에서도 할 수 있다”고 설득해 6자회담을 정착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다고 신문은 풀이했음.
- 앞서 중국은 ‘북·미 대화→6자 예비회담→6자 본 회담’의 3단계로 6자회담을 재개하자는 중재안을 미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 중 북·미 대화와 6자 예비회담을 섞은 예비회담을 개최하고 6자 본회담을 개최하는 2단계 안에 미국이 동의한 셈이 됨.

##### ● 주영 북한대사, ‘6자회담 6월 중순 전 재개’ 시사(3/19)

-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대사(유럽연합 주재 대표부 대사 겸임)가 ‘오는 6월 중순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9일 크리스티안 엘러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의장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자 대사는 18일(현지시간) 브뤼셀을 방문,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초청으로 2시간 가량 대표단 회의에 참석했음.
- 엘러 의장은 VOA와 전화인터뷰에서 “자성남 대사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된 한반도관계 대표단의 평양 방문 이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



이라면서, 북한은 6자회담 재개에 전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은 2004년 9월 설립 이후 정례적으로 남북한을 방문해왔으며, 올해에도 6월 4~12일 북한과 남한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임.

- 엘리 의장은 이어 “자 대사는 EU(유럽연합)의 대북 투자를 요청하면서, 북한 정부의 예산지출 방향이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면서 “북한 정부가 과거에는 국방비에 많은 지출을 해왔지만 현재는 사회기반시설 구축 등 경제 분야에 더 많이 지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소개했음. 엘리 의장은 또 “자 대사는 (북한의) 화폐개혁이 성공적이지 못했고, 특히 시행 초기에 일부 실패한 점이 있었는데 이는 일부 관리들의 부정부패 때문이라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화폐개혁 실패의 이유로 ‘일부 관리의 부정부패’를 거론한 자 대사의 발언은 최근 북한 당국이 화폐개혁 실패의 책임을 물어 전 노동당 재정계획부장 박남기를 총살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자성남 대사는 한반도관계 대표단 회의가 끝난 뒤 연합뉴스 특파원과 가진 단독인터뷰에서 “화폐개혁 시행 초기에 혼란이 없지 않았으나 지금은 다 수습됐다”면서 “화폐개혁은 인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으로 시행된 조치로서 초기의 혼란이 안정돼 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6자회담 재개를 향한 중국의 역할(3/19)

- 한국과 중국의 외교장관이 6자회담 재개문제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쓰기로 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외교부장은 베이징(北京) дя오위타이(釣漁臺)에서 회담을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이 밝혔음. 유 장관은 중국이 적극적인 외교노력을 경주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 대응과정에서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겠다고 밝힘.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양국 장관들이 북핵 문제와 6자회담 등, 공통으로 관심이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소개했음.
- 북한은 지난해 5월 핵실험 강행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제재를 결의하자 곧바로 “6자회담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음. 이후 김 위원장은 10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방북 때 “다자회담도 가능하다”고 했고 올 들어 1월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의 방북 때 다시 “6자회담을 재개하려는 유관 당사국들의 성의 있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함.
-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갈 전략 요충지로 지목해 중국이 그간 개방을 요청해온 라진항에 대해 북한 당국이 더욱 주도적으로 움직여 외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상황임. 이번에 김 위원장이 방중하면 먼저 동북 3성을 찾고 베이징으로 이동해 중국 지도부와 회담하는 일정을 택할 것으로 전망됨.



- 상하이에서 파격적으로 유명환 장관을 기내 영접하고 방중기간 영예 수행한 주한 중국대사 내정자는 현재의 한·중관계를 “百尺竿頭, 更上一樓(최상의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라고 표현했음.

### ● 이종석 “한·미·일, 북핵문제 더 집중해야”(3/18)

- 한국과 미국, 일본은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음.
-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7일 밤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이와나미(岩波)서점 7층 회의실에서 열린 ‘한·일 지식인이 대화’에 참석, “한·미·일 사이에서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가 떨어지면 6자회담이 열려도 북한의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만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음. 이 전 장관은 “특히 미국이 집중력을 발휘하지 않으면 중국도 혼자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을 테고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수준의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에 대한 서구와 중국의 이해관계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이 핵보유를 공식화하기 전에 한·미·일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대화를 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주면 북한은 점점 핵 능력을 키울 것”이라며 “한·미·일 3국 정부가 모두 북쪽이 자세를 바꾸기만 기다린다면 동북아 상황은 비관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고 말했음. 다른 참석자들도 북핵 문제에 대한 한·미·일 3국의 관심이 약한 것 아니냐고 우려했음.
- 이종원 릿쿄(立教)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에 북핵 문제를 ‘아웃소싱’한 것 아니냐고 의심이 들 정도로 의존도가 높아진 것 같다”고 미국측의 적극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도 “이전에는 북한이 북미 관계를 지나치게 중시하고 남북, 북일 관계를 경시한 반면 미국은 핵 문제를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였다”며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과 일본에 조금씩 눈을 돌리기 시작한 반면, 한국 정부는 북한이 더 변하길 기다리고 있고 일본 정부는 대북 정책을 정하지 못한 채 납치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음.
-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관료와 학자 등이 참여한 한국의 한반도평화포럼과 일본 이와나미 서점이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임동원, 정세현, 이종석 전 통일장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사카모토 요시카즈(坂本義和),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오카모토 아쓰시(岡本厚) 월간 세카이(世界)지 편집장 등 20여명이 참석했음.

### ● <한·중 외교회담..6자재개 전망은>(3.18)

- 중국의 중재 속에 속도를 내는 듯하던 6자회담 재개 흐름이 ‘정체’된 듯한 국면을 보이고 있음.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8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가 최근 기류를 잘 보여줬음. 양국 외교장관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자”는 원론적 기조만 확인한 것임. 물론 이번 회담이 6자회담 재개와 직결되는 성격은 아니지만 회담재개의 속도와 방향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일종의 바로미터로 기대돼왔음.

- 회담재개 조건을 놓고 대치중인 북·미 사이에서 적극적 조율을 시도 중인 중국의 중재가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는 지를 확인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중국은 북·중간 고위급 교차방문을 거친 뒤 이달 초부터 6자회담 각 당사국에 ‘유연성’을 주문하며 중재역을 모색해왔음.
- 중국으로서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약속하면 이를 토대로 북·미 추가대화→6자회담 예비회담으로 수순을 밟는다는 구상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전제조건을 내걸며 ‘긍정적 신호’를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임. 이와 관련, 정부의 고위당국자는 “현재로는 6자회담이 언제 열릴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북한을 제외한 5자는 언제라도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있다”며 “북한이 결심해서 입장을 정하는데 달렸다”고 강조했다.
- 한·중이 이번 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문제를 ‘로키(low-key)’로 다룬 것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5자가 지나치게 회담 조기재개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북한으로 하여금 마치 6자회담 복귀 자체가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지적임. 정부 고위당국자는 “회담 재개가 비핵화의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렇게 볼 때 앞으로 6자회담 재개 흐름은 당분간 ‘요란하지 않은’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모색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하지만 북핵 협상의 가변적 성격상 변수가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옴.

### ● 한·중 “각국 외교노력 6자재개 이어져야”(3/18)

- 한·중 외교장관은 18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현재 진행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회담 재개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중국 양제츠 외교부장은 이날 낮 베이징(北京) 다포위타이(釣魚臺)에서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 김영선 대변인이 전했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으로 적극적 외교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국 장관은 앞으로의 6자회담 재개 노력과정에서 관련국들과도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나가기로 했음. 양국은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북



핵 담당 실무당국자간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 소식통은 “중국측이 특별히 새로운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6자회담 조기재개를 모색하고 있는 중국측이 북한을 상대로 한 설득노력에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한 결과로 풀이됨.

- 두 장관은 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양국간 정상 및 고위급 인사교류를 적극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특히 오는 5월 열리는 상하이 엑스포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2012년 여수 엑스포를 계기로 주요 국제행사에 대한 상호 지지 입장을 확인했음.
- 두 장관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논의와 올해 11월 G20(주요 20개국)과 관련한 상호 협력, 한·중·일 3국간 협력 등 양국간 협력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음.
- 이날 회동은 당초 예정된 시각을 30분가량 넘긴 2시간 30여분 간 격의 없고 솔직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외교당국자들은 전했다. 유 장관의 이번 방중은 2008년 취임 이후 7번째이며 양 부장과는 13번째 회담을 가진 것으로 기록됐음.
- 양 부장은 회담 시작에 앞서 “Hello, my old friend(안녕, 나의 오랜 친구)”라며 유 장관을 환영했으며 유 장관도 양 부장을 “my close friend(나의 가까운 친구)”라며 친근감을 표했음. 두 장관은 회담장소인 조어대 12호각 앞에 심어진 ‘김일성 식수’(김 주석이 1959년 10월 2일 조선당정대표단장 자격으로 심은 것으로 알려짐) 앞에서 기념촬영을 한 뒤 회담에 착수했음.

#### 나. 미·북 관계

##### ● 미국무부 “北,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3/20)

- 미국 국무부는 19일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 대사가 올해 상반기 중 6자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말 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 고든 두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에 대해 언급을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6자회담에 복귀하는 것이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그간 6자회담에 재참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담에)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적했음.
- 두기드 부대변인은 “(자성남 대사가) 6자회담 재개에 조건을 달지 않은 것도 외견상 긍정적인 일이지만, 뒤이은 행동이 있어야 결실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두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희망하는 것이 6자회담의 재참여라면, 미국은 당장이라도 6자회담을 재개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복귀 의사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전달하면 회담재개를 위한 절차는 그 시점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에 앞서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이날 크리스티안 엘러 유럽



의회 한반도관계 대표단 의장의 말을 인용, 자성남 영국 주재 북한 대사(유럽연합 주재 대표부 대사 겸임)가 ‘오는 6월 중순 이전에 6자 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음.

### ● 美재무부, 北금융기관과 거래에 추가 주의보(3/19)

- 미국 재무부는 18일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을 미국 내에서 운영중인 금융기관에 권고했음. 재무부 금융범죄 단속반은 이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구(FATF)가 북한 등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제도가 미비한 나라로 지목했다고 전하면서 이같이 당부했음. FATF는 지난달 북한, 앙고라, 에콰도르, 에티오피아 등이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차단과 관련한 협력을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주의를 촉구했었음.
- 미 재무부는 이날 권고문에서 미국 내 금융기관들은 FATF가 지목한 국가의 승인 하에 운영 중인 외국은행들과의 거래에 더욱 강화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음. 앞서 미 재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후 북한 정부기관과 기업들의 불법 금융행위 개입 가능성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권고문을 보낸 바 있음.

### ● ‘키리졸브’ 연습 종료..北 특이동향 없어(3/18)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의 원활한 전개를 위한 ‘키 리졸브’(Key Resolve) 한미 합동군사연습이 18일 종료됐다고 국방부와 합동참모 본부가 밝혔음. 지난 8일부터 시작된 이번 훈련에는 주한미군 1만여 명과 증원미군 8천여명 등 1만8천여명의 미군을 비롯한 군단급 이상의 한국군 병력이 참가했음.
- 합참 관계자는 “이번 키 리졸브 연습과 같은 기간에 실시된 한미 연합 야외기동연습인 독수리훈련은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계획됐다”면서 “매년 계속된 연습으로 장비와 병력, 물자 전개 능력이 보완 향상되고 있다”고 말했음.
- 특히 올해는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제거를 전담하는 임무를 맡는 미군부대가 참가한 사실이 처음 공개되기도 했음.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한 이 부대는 미 메릴랜드주에 있는 제20지원사령부로 지난 2004년 10월 창설됐음. 미국 내는 물론 이라크 등 세계 전장 일선에 파견돼 WMD 신속대응과 탐지,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임.
- 또 키 리졸브 연습 첫날 북한군은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부대들은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라”는 ‘명령’을 하달하는 등 잇달아 대남 위협을 가했지만 실제 군사적 행동으로 는 옮기지 않았음.
- 이에 합참 관계자는 “북한은 매년 키 리졸브 연습을 전후로 상투적인 대남 비난 공세를 하고 있다”면서 “현재 북한군의 특이동향은 포



착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 한미 정보당국은 이와 관련, 작년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되는 북한군의 동계훈련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서해안 뿐 아니라 동해안에서도 특수작전부대를 동원한 상륙훈련과 침투훈련에 집중하는 것에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 군 관계자는 “북한의 특수작전부대가 동해안에서 상륙·침투훈련을 강화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치고 빠지는 식’의 기동타격대 개념의 전술 숙달 일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미연합사와 합참은 각각 19일과 22일 이번 연습 결과를 강평(평가)하고 보완 요소를 식별해 내년 연습에 반영할 계획이다.

### ● 北, 비망록 내 ‘키리졸브’ 비난..사상 처음(3/17)

-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17일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연습에 대해 사상 처음 ‘비망록’을 내 비난했다. 북한에서 비망록은 ‘중요한 사건이나 문제에 대해 관련 사실과 자료를 공개하고, 자기 나라의 입장을 밝히는 문서’라는 뜻을 갖는데, 북한이 ‘키리졸브’ 군사연습에 대해 비망록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중앙통신을 포함한 북한의 언론매체에 비망록이 마지막으로 등장한 것은 2007년 5월 일본의 역사 왜곡을 비판했을 때 었음.
- 중앙통신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과정을 파탄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제목의 비망록에서 “키리졸브 연습은 ‘방어적 대응타격’이 아니라 우리를 선제 공격해 점령하기 위한 전쟁 각본 ‘작전계획 5027’ 등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그 어느 때보다 조선반도의 평화를 요구하고 비핵화를 위한 유관측의 움직임이 다시금 활기를 띠려 할 때” 이 같은 군사연습을 벌인 것은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 통신은 이어 북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면서 “미국은 핵문제, 핵위협, 군사·정치적 근원인 조미(북미)사이 전쟁상태,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신뢰를 쌓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 ● <캠벨 “김정일, 남은 수명은 3년”>(3/17)

-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지난달 방한 중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수명이나 북한의 후계작업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략적으로 개진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 캠벨 차관보는 지난 2월3일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 민주당 장상 최고위원, 탈북자 등과 비공개로 면담한 자리에서 “의학적인 소견을 종합해보면 김 위원장의 수명은 3년”이라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한 참석자는 “면담자리에서 자연스럽게 김 위원장의 건강 문제를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김 위



원장의 수명이) 5년 못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캠벨 차관보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오간 것 같다"고 말했다.

- 캠벨 차관보는 또 북한의 후계체제 구축작업과 관련해선 '김일성→김정일'로의 권력 승계 때와 '김정일→김정은' 승계 과정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이 참석자는 전했다. 이어 캠벨 차관보는 김정은 권력체제가 확립됐을 때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이 후견인 역할을 할 것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흔들릴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 졌음. 또 다른 참석자는 "비공식적으로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 등을 얘기했다"면서 "북한의 권력승계 등에 관해 뚜렷하게 얘기한 것은 아니었다"고 전했다.

### ● 北, 억류 미국인 추가면담 허용(3/17)

-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에 대해 추가적인 면담을 허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16일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보호국 역할을 하는 스웨덴이 억류된 미국인과 "지난 24시간 이내에 추가적인 접촉을 했다"고 전했다.
- 크롤리 차관보는 하지만 해당 미국인의 신원이나 체포 경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음. 앞서 북한은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했다고 1월말 발표한 뒤 2개월 가까이만인 지난 14일 북한주재 스웨덴 대사관측을 통해 해당 미국인과의 영사적 접근을 처음 허용했음. 국무부 관계자는 "(미 당국) 가족들과도 접촉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6자회담 재개 문제에 대한 질문에 "수많은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6자회담 재개를 기대하고 있으며, 북한이 약속을 하고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그 약속을 지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스타인버그 "北과 폭넓은 이슈 논의 가능"(3/16)

- 미국 국무부 내에서 대북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15일 "미국은 물론 우리의 파트너들은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폭넓은 이슈에 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미국의 외교 우선순위'를 주제로 행한 강연에서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선언의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그러나 미국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는 것만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강조, 대북 제재 해제 같은 조치가 협상 복귀 전에 선행되기 힘들 것임을 시사했음.
- 그는 북한이 지난해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장거리 미사일 실험과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던 점을 상기시키고, "그러나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성명에 이어 유엔 결의 1874호 채택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음.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강연 후 6자회담 재개시기를 묻는 말에는 답을 하지 않았음.

### ● 北, 억류 미국인 영사접근 허용(3/16)

- 북한이 억류하고 있다고 밝힌 미국인에 대한 영사적 접근을 허용했다고 미국 국무부가 15일 밝혔음. 미 국무부는 정레브리핑에서 북한이 억류중인 미국인에 대해 2개월 가까이 만에 처음으로 전날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을 통한 영사적 접근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우리의 이익보호국인 스웨덴 대사관측에 14일 영사적 접근을 허용했다”고 밝혔음. 롤리 차관보는 그러나 해당 미국인의 신원에 대해 “그의 신분을 공개할 자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며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음.
- 앞서 북한은 지난 1월 25일 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했으며, 해당기관에서 조사중이라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혔음. 일부 언론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은 28세의 남성으로 자본주의가 싫어 북한으로 들어갔다고 보도한 바 있음.
- 북한은 지난해 여기자 2명을 억류했다가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석방한 바 있으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북·중 국경을 넘어 무단 입북한 미국 국적의 한국계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을 지난달 초 석방했음.
- 한편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로버트 킹 국무부 대북 인권특사가 유엔 인권이사회 총회에 참석중인 사실을 전하면서 “유엔(북한)인권 보고관을 면담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 채택을 다른 나라들이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음.

### 다. 중·북 관계

#### ● “중지방정부, 라진항 도로 500억원 투자”(3/21)

- 중국 지린(吉林)성 정부가 한화 500억원에 달하는 3억위안을 직접 투자해 북중 국경인 함경북도 은덕군 원정리에서 라선특별시 라진항에 이르는 도로를 현대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음. ‘창지투(長吉圖) 선도구’ 사업 일환으로 라진항 진출에 주력하는 지린성이 실제 투자를 집행하면 북핵 제재 국면에서 이뤄지는 중국의 첫 대규모 대북 인프라 투자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북한 인프라 전문가인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한교통연구센터장은 21일 “중국 지방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지린성 성장이 북한을 방문해 3억 위안을 직접 투자해 라진항 도로 확장 및 포장 사업을 해주겠다는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음. 원정리-라진항 도로 60여km는 대부분 2차선 너비의 비포장 흙길인데 비만 오면 도로 곳곳이 패여 화물차 전복사고가 빈번할 정도로 노면 상태가



나쁘다고 알려짐.

- 앞서 2005년 중국 동린(東林)경제무역회사는 원정리-라진항 도로 건설을 조건으로 라진항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획득했으나 이후 외부 투자 유치에 실패함으로써 3호 부두 사용권은 결국 러시아로 넘어감. 대신 중국 창리(創立)그룹은 2008년 원정리-라진항 도로 개보수를 조건으로 1호 부두 10년 사용권을 따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안 센터장은 그러나 “창리그룹은 도로 공사 비용을 댈 수 있는 규모의 기업이 아니다”라며 “민간이 부담하기에 너무 큰 금액이다 보니 지린성 정부가 직접 투자에 나섰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가 중요 건설 사업에 동원되는 북한 인민군 2개 공병여단이 최근 라선시 일대와 청진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공사가 본격 진행되는 징후도 포착됐음.
- 탈북자 단체인 NK지식인연대의 한 관계자는 “라선 남쪽 후창초소, 승리화학공장 인근과 청진 모처 등 최소 3곳에 공병 2개 여단이 전개해 숙영지를 건설하고 주둔해 있다”면서 “도로포장, 다리·터널 공사, 철도 공사가 이들의 임무”라고 전했다.
- 이 관계자는 “공병여단은 북한 내에서 기술력과 장비, 인원 면에서 큰 역량을 가진 부대인데 특정 지역에 두 개 여단이나 투입됐다면 대단한 규모”라며 “민간에서도 청년돌격대 등을 조직해 인력 지원에 나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안 센터장은 이에 대해 “중국 민간 기업이 직접 들어가서 공사를 하기보다는 북한 공병부대와 청년돌격대가 건설을 주로 맡고 콘크리트, 유류, 중장비 등 자재를 중국이 북한에 대주는 형태로 보인다”며 “이렇게 할 경우 인건비가 낮아져 중국에 비해 5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빠르면 1년 이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전망했음.
- 조봉현 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은 훈춘과 원정리를 잇는 국경다리 보수공사를 며칠 전부터 시작하는 등 라진항 부두를 본격 이용할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일단 올해부터 동북 지역의 석탄 연간 120만t을 라진항을 통해 중국 남부지역으로 수송할 수 있을 게 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 “北 두만강개발 탈퇴는 라진 몸값 높이기”(3/21)

- 북한이 지난해 11월 유엔개발계획(UNDP)의 두만강 개발계획에서 갑자기 탈퇴한 것은 라진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음.
- 중국의 북한문제 전문가인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중국 잡지 재정(財經) 최신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최근 추세와 정세로 볼 때 이같은 의혹이 짙다는 입장을 피력했음. 장 교수는 지난해 11월 중국 정부가 두만강 개발계획을 국가전략 산업으로 지정했으며 같은 시기에 북한이 유엔개발계획의 탈퇴를 선언했다는 점에 주



목했음.

- 그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난해 11월 17일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 개방 선도구 사업을 국가전략 사업으로 승격시켰고 같은 달 말 북한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UNDP 사업에서 빠지겠다고 선언한 게 연관이 있다는 지적임.
-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북한이 중국에 라선특별시의 라진항을 개방한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알려졌음. 중국 양회 기간 북한이 라진항의 제1호부두 10년 사용권을 이미 중국 기업에 제공했으며 사용기간을 추가로 10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중국 지린성 당국자를 통해 확인된 것임.
- 장 교수는 지난해 말부터 북한이 보인 행보는 라진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중국의 바닷길을 자국의 통제 하에 있는 라진항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음.
- 그는 ▲북한은 중국의 두만강을 통한 바다진출 가능성을 늦출 수 있고 ▲라진 항만과 교통망을 확충할 수 있으며 ▲거액의 임대료도 챙길 수 있고 ▲중국의 유일한 동해 해상 통로를 자국의 통제하에 둘 수 있는 1석 4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풀이했음.
- 중국의 동북3성 중 지린(吉林), 헤이룽장(黑龍江)성은 자원이 풍부하고 발전 가능성은 크지만 러시아와 북한으로 바닷길이 막혀 왔기 때문에 두만강 개발을 통해 바닷길을 뚫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었던 점에서 북한이 라진항을 지렛대로 삼았다는 것임.
- 장 교수는 또 라진항 개방과 국가개발은행 출범, 투자유치 등 최근 북한의 새로운 움직임에는 일각에서 기대하는 개혁개방의 의지는 담겨 있지 않다고 분석하면서 북한이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주축으로 한 선군정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려는 조짐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북한이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는 것은 제재를 무력화해 국방위원회가 필요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선군정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 “北 ‘번영하는 평양’ 주제로 上海박람회 참가”(3/21)

- “강성대국 건설에 나선 조선 인민의 정신과 풍모를 반영하면서 ‘공원 속의 도시 평양’의 면모를 세계 만방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리성운 북한(조선)상공회의소 부소장은 지난 18일 평양 주재 중국 신화통신 특파원과 인터뷰를 하고 “상하이 엑스포에 설치될 ‘조선관’ 건설 등 엑스포 참가 준비가 마무리 단계이며 조만간 시운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중국 동포 매체인 조글로 미디어가 21일 보도했음.
- 리 부소장은 “150여년의 역사를 가진 세계 엑스포에 조선이 처음으로 참가한다”며 “새로운 것에 대한 학습과 함께 세계 각국의 관계자



들과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엑스포에 참가한다”고 말했다. 상하이 엑스포는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184일간 상하이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황푸강(黃浦江) 둔치에서 열림. 황푸강 양쪽 강변에는 길이 8.3km, 면적 5.28km<sup>2</sup> 규모의 엑스포 단지가 마련돼 있음.

### ● 中, 北 관광노선 다변화 시도(3/18)

- 중국이 4년 만에 북한 단체관광 금지 조치를 전면 해제한데 이어 북한관광 전용열차를 운영키로 하는가 하면 관광노선 다변화에도 적극 나서는 등 북·중간 관광 교류가 활기를 띠 전망임.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국가여유국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북한관광 노선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동북지구 관광업 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 지난해 국무원이 확정한 ‘동북 노후공업기지 진흥전략’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이번 계획은 북한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육로관광 활성화와 새로운 국내외 관광지 개발 등을 통해 동북지역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이를 통해 연간 3억5천만명선인 동북 지역(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네이멍구) 방문 관광객을 2015년까지 8억 명으로 끌어올려 이 지역 관광수입을 현재의 3천422억 위안에서 8천560억 위안으로 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임.
- 이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북한관광 노선의 신설임. 기존의 선양-단둥-평양 관광노선 이외에도 지린성 바이산(白山)-창바이(長白)현-북한 혜산 노선과 옌지(延吉)-훈춘(琿春)-팡촨(防川)-라진·청진 관광노선이 새롭게 해외 중점노선 개발 대상에 포함됐음.
- 지금까지 중국의 북한관광 노선은 단둥에서 신의주를 거쳐 평양에 들어가는 노선과 옌벤에서 산허(三合)-청진, 칠보산을 가는 코스, 백두산-삼지연-평양을 잇는 코스 등에 불과했음. 국가여유국은 라진항이 개방되면 훈춘-라진을 거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한국, 일본 등을 오가는 환동해 유람선 관광도 추진할 계획임.
- 이에 앞서 옌벤(延邊)조선족자치주는 지난달 훈춘에서 라진을 거쳐 평양과 판문점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북한관광 노선의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어 중국의 북한관광 노선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 중국 당국이 도박 성행을 이유로 2006년 전면 금지했던 북한 단체관광을 다음 달 12일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저장(浙江)성 항저우(杭州)에서 8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대형 북한관광 전용열차가 등장하는 등 중국인들이 북한관광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음.

### ● “김정일, 이달 25~30일 방중 가능성”(3/17)

-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달 25~30일 중국을 방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문제에 정통한 한 외교소식통은 17일 “중국 최고지도자들의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25일부터 30일 사이



- 에 김 위원장이 방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면담을 원하는 한국 유력 정치인의 이달 말 방중 계획도 이런 사정 탓에 늦춰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지도부는 과거에도 김 위원장이 방중할 경우 북·중 우호관계를 감안해 해당 기간에 자국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중복해서 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특히 김 위원장의 의전을 책임지게 될 중국 공산당 왕자루이(王家瑞) 대외연락부장의 경우 이달 중 아예 해외방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연락부는 북한 노동당 국제부의 카운터파트로 ‘당(黨) 대 당(黨)’ 차원에서 북한 최고지도자의 방중 의전을 맡음.
- 오는 20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 핀란드, 스웨덴을 공식 방문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도 이달 말 귀국할 예정이어서 김 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지적도 있음. 주요 외교사절의 방중 일정을 봐도 이달 말 후 주석과 양제츠 외교부장의 일정은 비어있음.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후 주석의 초청으로 오는 23~25일, 머레이 맥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이 23~25일, 토니오 보르그 몰타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3~26일 중국을 공식 방문함.
- 김 위원장의 방중 ‘동선’과 관련해서도 동북 3성을 거쳐 베이징(北京)으로 와 중국 지도부와 회담하고 귀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김 위원장은 과거 베이징을 먼저 들른 후 다음 방문지를 거쳐 귀국했었음. 특히 지난달 방중했던 북한의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이 고(故) 김일성 주석이 2년간 다녔던 지린(吉林)시 위원(毓文) 중학교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김 위원장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하면 위원 중학교를 찾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 北김영일 총리, 류홍차이 中대사 접견(3/16)

- 북한의 김영일 내각 총리가 16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류홍차이(劉洪才.54) 신임 중국 대사를 접견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음.
-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양국 수교 60주년이었던 지난해에 활발했던 교류활동을 거론하면서 “조선(북한)은 조·중관계의 발전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과거 중국의 공산당과 정부, 국민들이 조선 사회주의 건설에 물질적, 정신적인 지지를 보냈고 조선 인민은 이를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라며 감사를 표시했음.
- 김 총리는 그러면서 “조·중 우호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공고히 발전시켜간다는 것은 조선 노동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올 들어서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방면에서의 양국 협력관계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면서 “특히 경제와 무역부문의 발전이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 김 총리의 이 발언은 올 들어 북·중 양국이 라진항 개발을 두고 활발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이에 류 대사는 “중·조 전통우호관계는 역사가 유구하다”며 “지난해 수교 60주년 행사를 통해 양국이 공고한 우호관계를 전 세계에 알렸을 뿐더러 (중국과 북한의)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전통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식을 심어줬다”고 화답했음.

- 류 대사는 지난 5일 평양에 도착했으며 8일에는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게 신임장을 제출했음.

### ● <중외교가, 김정일 방중 여부에 촉각>(3/15)

- 베이징 외교가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중국방문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음. 북한문제에 정통한 베이징의 한 외교소식통은 15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방중 날짜는 파악이 안 된다”고 밝혔음. 이와 관련해 베이징 외교가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가 13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4일 종료된 만큼 북·중 당국 간에 김 위원장의 방중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 일각에선 지난 1월말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의 방북과 지난 2월 김영일 노동당 국제부장의 방중을 통해 북·중 양국은 김 위원장에 대한 방북 초청과 이에 대한 ‘수락’ 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고 경호문제와 중국내 철도 교통사정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날짜를 곧 확정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음.
- 중국의 당국자들은 최근 부쩍 두만강과 압록강 주변의 투자와 관련해 기업 또는 개인의 정상적인 거래와 투자에 대해 알기알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양국은 중국으로선 동북 3성이 태평양으로 뻗어갈 수 있는 경제전략적인 곳이고 북한으로선 중국 투자를 유치해 경제개발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라진항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음. 전인대 회의 기간인 지난 8일 리룽시(李龍熙) 지린(吉林)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당위원회 부서기는 8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북측이 라진항 3호부두를 50년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러시아에 제공했고 2008년 중국에 제공했던 제1호 부두 사용권을 10년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이를 공개하기도 했음. 따라서 김 위원장이 이달 중에 방중한다면 이를 계기로 라진항 개방의 후속절차가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중국이 투자차원에서 북한에 위안화 차관을 제공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 라. 기타

#### ● 러 극동서 탈북자 잇단 망명신청(3/21)

- 북한 탈북자들이 러시아를 통해 한국 또는 제3국으로 망명을 시도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발행되는 인터넷 매



체 프리마 미디어가 21일 보도했음.

-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 블라디보스토크 현대호텔 입구에서 별목공으로 일하던 북한주민 김모씨가 미국으로 망명하기 위해 유엔난민최고대표, 미국 외교관 등을 만나려다 러시아 공안당국에 의해 체포됐음.
- 러시아 아무르주에서 별목공으로 일하다 탈출한 김씨는 이날 러시아 당국에 의해 나훗카에 있는 북한 영사관으로 호송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공안당국에서는 이에 대해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음.
- 프리마 미디어는 또 지난 9일에도 별목공으로 일하던 탈북자 2명이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 담을 뛰어넘어 들어와 미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요청했다고 밝혔음. 지난해 10월에는 아무르주에서 별목공 등으로 일하던 탈북자 12명이 집단으로 망명을 신청, 한국으로 가는 데 성공했으며 예전에도 중국 국경을 넘어 러시아로 온 탈북자 2명이 한국과 미국으로 망명했다고 전했음.
- 이처럼 탈북자들이 러시아를 주된 탈북 루트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조지 부시 당시 미국 대통령이 북한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기 때문으로 당시 이 같은 조치가 발표된 후 10일 만에 한 탈북자가 주블라디보스토크 미국 영사관 옆 건물 지붕 위에 올라가 정치적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음.
- 러시아 공안당국은 탈북자들이 블라디보스토크 등 자국을 통해 제3국으로 망명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이 같은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9일 탈북자를 검거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음.

### ● 北김영남, 아프리카 3개국 순방 예정(3/20)

- 북한 권력서열 2위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아프리카의 가봉, 세네갈, 감비아를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음. 중앙통신은 김 상임위원장의 순방 날짜와 목적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채 “곧 방문하게 된다”고만 짧막하게 소개했음. 김 상임위원장은 지난해 5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를 순방했고 2008년 3월에는 나미비아, 앙골라, 콩고, 우간다 등 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하는 등 거의 해마다 아프리카 순방 외교에 나서고 있음.

### ● “北기자동맹, 獨방송에 협력 제안”<RFA>(3/20)

- 북한의 조선기자동맹이 지난해 말 언론인 연수를 포함한 상호협력을 독일 방송측에 제안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했음. 독일 국제방송인 ‘도이치벨레’가 운영하는 방송연수원의 헬무트 오상 아시아국장은 지난 18일 RFA에 “조선기자동맹의 국제부에서 우리 연수원에 ‘서로 협력하자’며 편지를 보내왔다”며 “북한 측이 자발적으로 우리에게 언론 협력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라고 말했다.

- RFA에 따르면 앞서 2007년 북한의 대외매체인 평양방송의 방송요원 2명이 도이치벨레 라디오본부에서 북한 주제 독일대사관과 독일 외교부의 지원으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음.
- 조선기자동맹측은 또 편지에서 “동맹이 언론인이 되기를 원하는 대학 졸업생들에게 자체 연수원에서 약 6개월의 강도높은 훈련을 실시하며, 연수 프로그램에는 기자실습과 컴퓨터 그리고 사진 촬영기술 등 다양한 과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고 RFA는 전했다.
- RFA는 북한측의 제안이 수락됐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은 채 “오상국장이 최근 북한측에 보낸 답장에서 올해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 미디어 정상회의’에서 서로 만날 수 있기를 희망했다”고 덧붙였다.

### ● 룩셈부르크, 김정일 비자금 예치 부인(3/19)

- 룩셈부르크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자국에 미화로 거액의 비자금을 예치하고 있다는 영국 신문의 보도를 부인했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9일 보도했음. 이 신문 인터넷판에 따르면 룩셈부르크 총리실은 이날 발표한 정부견해에서 “북한 금융자산의 존재를 표시하는 단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총리실은 또 사실관계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앞서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김정일 위원장이 외국에 강제로 도피하는 비상상황에 대비, 미화 40억 달러(약 4조5천300억원)에 달하는 비자금을 스위스 은행에 보관하다가 최근 룩셈부르크 은행으로 옮겼다고 지난 14일 보도했음.

### ● 佛외교 “北에 대사관 개설 않을 것”(3/18)

- 프랑스의 베르나르 쿠슈네르 외교장관은 18일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음. 일본을 방문한 쿠슈네르 장관은 “우리는 분명히 (북한에) 대사관을 개설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비정부기구(NGO)를 지원하는 사무소를 열 것”이라고 말했음.
-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2월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한 자크 랑 하원의원을 통해 북한에 문화협력사무소 개설을 제안했고, 북한도 이에 동의했음. 랑 의원은 지난 17일 파리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간담회에서 “(평양) 사무소 설치의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아직 장소 선정 등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여름 이전에는 협력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고 말했음.
- 현재 많은 유럽연합(EU) 회원국이 2000년 이후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했지만 프랑스는 북한의 인권상황 등을 들어 수교를 미루고 있음. 이날 쿠슈네르 장관은 평양 사무소 개설을 통해 현지에서 활동하는 NGO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보상하는 것은 아니라 밝힘.



### ● 潘 총장 “기회 되면 북한 방문할 것”(3/15)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5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재개를 돕는다면 북한을 방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반 총장은 오는 19일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중동문제 ‘4자 조정그룹’ 회담 참석에 앞서 이날 뉴욕에서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 단독 인터뷰를 하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6자회담 재개만 될 수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무엇이든 할 것이고 기회가 되면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 그는 “유엔 사무총장 특사로 린 파스코 유엔 사무국 정무담당 사무처장이 지난달 북한을 방문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었다”면서 “당시 방문은 2004년 이후 (유엔과) 북한 당국과의 최고 수준의 첫 대화였으며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파트너십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또 북한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매우 걱정스럽다”고 표현하면서 “유엔은 북한에 원조를 보낼 준비가 돼 있고 북한과 다른 분야에서도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반 총장은 중동평화 협상을 촉진하기 위한 이번 4자 조정그룹 회담에 대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직접 협상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번 회담을 주선해 준 데 대해 고맙다”고 전했다.
- 그러면서 반 총장은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번 협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이스라엘도 (중동 평화 협상 진전에)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담에는 반 총장을 비롯해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 유럽연합(EU)외교정책 담당 캐서린 애슈턴, 4자 그룹의 특별대표를 맡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 ● 北 ‘아리랑’ 팀, 베트남 집단공연 지원(3/15)

- 북한의 ‘아리랑’ 공연 지도단 선발팀이 오는 10월 10일로 예정된 하노이 정도(定都) 1천년 기념 공연을 자문하기 위해 최근 베트남에 입국했다고 사이공 티엠티지(誌) 5일 보도했다.
- 이번 주 베트남에 도착한 선발팀은 북한 문화성 아리랑공연부의 송평국 부국장을 단장으로, 집단체조, 무대장치, 카드섹션, 무대음향과 조명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
- 송 부단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집단공연이 가장 독창적으로 잘 펼쳐질 수 있도록 관련 인적자원을 포함한 기본 공연환경을 정확히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발팀은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대표들과 모임을 가진데 이어 하노이의 미딩경기장(4만석 규모)과 호찌민 주석묘소 등 공연이 이뤄질 장소 등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 집단체조와 카드섹션 등으로 구성된 ‘아리랑’은 연인원 10만명이 출연하는 대표적인 북한의 공연 중 하나로 꼽힌다.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샤프 “주한미군 평택이전 5~6년 걸릴 것”(3/21)

-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은 21일 주한미군의 평택기지 이전은 그 규모와 복잡성으로 인해 5~6년간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군 전문지인 성조지(紙)에 따르면 샤프 사령관은 주한미군 재배치 시기에 대해 언급하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음.
- 현재 한미는 용산기지 이전 시기는 2014년으로 합의했으나 동두천과 의정부의 미 2사단을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측은 2015년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측은 2016년 초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평택기지 이전 사업비는 약 130억 달러가 소요되며, 이전이 완료되면 평택기지에는 1만7천 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게 됨. 샤프 사령관은 “현재 이전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매우 만족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능한 한 빨리 이전하길 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전투력을 저하시키지 않으면서도 미군과 그들의 가족을 이동시키고 기지 건설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그는 “주한미군이 평택 기지로 이전하게 되면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시설은 약 105개에서 45개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우리 군 관계자는 “평택기지 이전이 가능한 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현재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은 미국의 예산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 했음.
- 한편 샤프 사령관은 지난 18일 종료된 유사시 한국방어를 위한 한미 키리졸브 연습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음. 그는 “이번 훈련은 북한이 공격하거나 그전에 한미가 증원군 파병을 포함해 어떻게 조치하고, 또 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어떻게 위협을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 ● “한국, 일본 맘먹으면 핵장치 만들 수 있어”(3/18)

- 미국 국방부 산하 합동군사령부(USJFCOM)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핵장치(nuclear devices)를 빠른 시간 안에 만들 수 있는 고도로 발전된 기술을 지닌 국가”라고 규정했음. 합동군사령부는 지난달 18일 펴낸 ‘2010 합동작전 환경평가보고서’에서 태평양 및 인도양 지역의 안보현황을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잠재적 핵능력을 이같이 평가한 것으로 17일 확인됐음.
- 합동군사령부는 지난 2008년 보고서에서는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명기해 파문을 일으켰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기술과 핵탄두를 운반하는 수단인 미사일 기술의 개발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는 또 “미국의 안보에 계속되는 위협은 핵무기의 확산”이라며 “북한은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핵장치 실험을 시도했고, 이에 필요한 분열성 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인접 국가 및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협상력)를 높이기 위해 초기단계인 핵능력을 무기화하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음.
- 이번 보고서는 2009년을 거르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온전히 반영한 것으로 보임.
- 합동작전 환경평가 보고서는 합동군사령부가 미래에 미군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상황과 위협, 이에 따른 대응책과 관련해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경우, 1년 혹은 2년 단위로 이를 정리해 발표하고 있는 보고서임.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아시아 지역의 영토분쟁과 관련해 카슈미르(인도-파키스탄), 남사군도(중국-베트남-필리핀), 쿠릴열도(일본-러시아), 오키나와 주변 무인 군도(중국-일본) 등을 대표적 분쟁지역으로 꼽았음.
- 보고서는 “황해(Yellow Sea.서해)의 상당부분은 잠재적 석유매장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한국, 일본, 중국 사이에 분쟁이 일고 있다”고 소개했으나, 한국과 일본 사이에 논쟁이 제기돼 온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보고서가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것은 한국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일 수도 있어 주목됨.

### ● 카터 전 美대통령 다음 주 한국 온다(3/16)

-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9년 만에 방한함. 복수의 외교소식통은 16일 카터 전 대통령이 고려대에서 수여하는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부인인 로잘린 카터 여사와 함께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터 전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지난 2001년 사랑의 집짓기 행사 참가차 방한한 이후 처음임.
- 카터 전 대통령은 방한 기간 중 22일 고려 사이버대학(한국디지털대학) 케어기빙(Caregiving.돌봄)센터와 조지아주 사우스웨스턴주립대의 로잘린 카터 인스티튜트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할 예정임. 이어 23일 고려대에서 정치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받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 카터 전대통령은 북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제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북한을 개인 자격으로 방문, 당시 북한의 김일성 주석과 회담하고 남북 정상회담 약속을 받아내는 등 북.미 협상의 물꼬를 튼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외교소식통들은 카터 전대통령의 이번 방한이 북핵문제외는 직접적



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 정부측에 일정한 조언을 해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 ● 안경률, 美서 FTA 비준 촉구대회(3/15)

- 한나라당 재외국민협력위원장인 안경률 의원은 17~20일 미국 워싱턴, 덜러스, 로스앤젤레스(LA)에서 미 하원 중진 인사들과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 행사에는 한국 측에 당 재외국민협력위 소속 이근현 정옥임 의원, 한덕수 주미대사가, 미국 의회에선 에니 팔레오마베가 하원외교위 아태소위원장, 다나 로라바키, 피트 세션스, 다이앤 왓슨, 제럴드 코넬리 의원과 톰 레퍼트 덜러스 시장 등이 참석함. 참석자들은 행사에서 한미FTA 비준촉구 서명서를 작성해 미 연방의회와 연방정부 국제무역부에 발송하고, FTA 비준 캠페인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함.
- 안 의원은 “교민 지도자들과 협의해 수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11월 미국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해 상반기 중 반드시 FTA 비준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 의회 및 현지동포와의 네트워킹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 한·중 관계

#### ● 中, 한·중 외교장관 회담 호평(3/18)

- 중국 정부는 한국과 중국이 18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양국간 협력 강화와 한단계 높은 양국 관계 발전을 추진키로 했다며 회담 결과를 높이 평가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이 이날 오전 회담을 가졌다”면서 “양국 장관들은 각 분야의 협력 강화와 양국 관계의 한 단계 높은 발전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 외교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漁臺)에서 회담을 갖고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관련, 현재 진행 중인 각국의 외교적 노력이 회담 재개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논의로 이어지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음.

#### ● “한·중 외교회담 매년 2회 정례화”(3/1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한국 외교장관이 매년 2~3월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 외교장관은 매년 하반기에 방한하는 교차방문을 정례화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중국 베이징(北京)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동행 기자단 및 베이징 특파원단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강화해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이번 교차방문



은 한·중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또 오는 4월초 서울에서 차관급 한·중 전략 대화를 갖기로 했음.

### ● 유외교, 中에 ‘탈북자’ 협조요청(3/1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8일 오후 베이징(北京) 중난하이(中南海)에서 명젠주(孟建柱.62)公安부장과 면담을 갖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중국 정부가 긴밀히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외교장관이 중국의 치안총수격인公安부장을 면담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중국 정부가 탈북자와 관련해 여러 가지 협조를 해준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에 대해 명 부장은 한국 정부의 입장을 유의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고위당국자는 “유 장관이 이번 면담에서 탈북자 문제는 남북관계와 중북관계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중국 정부가 탈북자를 한국 또는 본인들이 원하는 곳으로 조속히 보내줘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유 장관은 또 양국간 공안관련 사안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상호이해와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날 면담에서 명 부장의 올해 한국방문을 요청했으며, 이에 명 부장은 사의 표명과 함께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당국자가 전했다.
- 명 부장이 한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公安부장의 사상 첫 방한이 된다고 외교당국자는 설명했다. 이날 면담에서 유 장관과 명 부장은 양국간 인적교류의 증가에 따라 영사, 출입국, 형사공조, 재난대응 등 치안·수사 분야의 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음. 유 장관은 중국내 아국인 범죄 피해보호와 수감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중국측의 협조를 각별히 당부했음.
- 정부 고위당국자는 “작년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는데도 450만명이 상호 방문했으며 이중 한국 방문객이 320만명을 넘고 있다”며 “많은 인원이 방문하면서 출입국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본의 아니게 사건에 휘말리는 범죄자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 보다 긴밀히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 당국자는 이어 “양국간에 엄청난 정보교환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대테러에서 협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 유외교 오늘 방중..上海 엑스포 시찰(3/1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위한 협의차 17일부터 2박3일간 중국을 방문함.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상하이(上海)를 방



문, 환구금융중심(環球金融中心) 등 푸둥지역을 둘러보고 오는 5월 개최되는 상하이 엑스포 단지내 전망대와 한국관, 중국관, 한국기업 연합관 등을 시찰할 예정임. 유 장관은 이어 18일 오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양제츠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 및 오찬을 갖고 오후 인민대회당으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예방할 예정임.

- 유 장관은 양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유 장관은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포함한 북핵문제와 동북아 정세를 중점 협의하고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의 내실화를 위한 양국 고위인사간 교류 확대와 한·중관계 발전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유 장관은 또 중국의 치안총수에 해당하는 명젠주(孟建柱.62) 공안 부장과의 만나 대테러와 수사공조, 탈북자, 재난 대응 등 다양한 양자현안을 협의할 예정임.

#### ● <장신썬 “百尺竿頭, 更上一樓”>(3/17)

- “百尺竿頭, 更上一樓(백척간두, 경상일루: 현재 최상의 관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겠다)” 17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영예수행중인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 내정자는 한·중관계를 이렇게 표현했음.
- 한·중관계를 한단계 더 격상시키는데 전력투구하겠다는 의지가 읽혀지는 대목임. 이를 두고 중국어 통역인은 “더할 나위가 없이 좋은 관계를 뜻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했음.
- 장 대사는 이날 상하이에서 유 장관을 영접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한관계의 발전’을 수차례 강조했다. 장 대사는 먼저 한·중수교 이전인 1990년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의 소감을 피력했음. 장 대사는 “20년전 한국은 아시아 4룡(龍)중 하나였다”며 “방한 당시 한국의 경제와 사회문화적 발전상을 보고 크게 감명을 받았었다”고 말했음.
- 장 대사는 특히 “한국은 중국과 가까운 이웃나라로서 그동안 깊은 관심을 기울여왔다”고 말하고 “한국은 저에게 두꺼운 책”이라며 “앞으로 열심히 읽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난 18년간 한·중 관계는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방위적으로 발전해왔다”며 “올해 상하이 엑스포와 중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중·한 관계가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음. 그는 또 “양국 관계는 이미 ‘윈-윈’ 관계가 형성됐다”며 “새로운 시기를 맞아 더 높고, 더 깊게, 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장 내정자는 한걸음 더 나아가 양국 교역규모와 관련, “현재 한·중교역이 1천800억 달러(홍콩 경유 포함)에 달하는데 재임 중에 2천억 달러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장 내정자는 또 “한국에 부임하면 한국 고위인사들과 자주 만나고



기자들과 협력하면서 중·한 우호관계를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음. 장 내정자는 신임장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달 말 또는 내달 초 한국에 부임할 예정임.

### ● “주한中대사 아그레망도 빨리 졌다”(3/17)

- 장신선 주한 중국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주재국 동의) 절차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마무리된 것으로 17일 확인됐음.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장 주한대사 내정자에 대해 아그레망을 부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조만간 중국 측에 통보할 예정임. 이는 정부가 장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접수한 지 열하루 만임.
- 통상 정부의 아그레망 절차가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되는 점에서 미뤄볼 때 장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 부여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의를 표시한 것으로 풀이됨.
- 유명환 외교부 장관 방중에 맞춰 장 대사 내정자에 대한 아그레망을 부여하기 위해 서둘렀다는 관측도 나옴. 장 대사는 이날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유 장관을 영접,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도 류우익 대사에 대한 아그레망을 보름여 만에 이례적으로 빨리 부여했고 중국측도 류 대사의 위상 등을 고려해 최선임 국장인 장 내정자를 주한대사로 내정한 것으로 안다”며 “아그레망 절차 조기 마무리는 중국의 호의적 조치에 대한 우리 나름의 성의 표시로 볼 수 있다”고 말했음.
- 중국 정부는 통상 접수에서 부여까지 최소 한 달 걸리는 아그레망을 지난해 11월 류우익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17일 만에 부여했었음.

### ● 한·중 ‘무비자 입국’ 추진 난항(3/15)

- 정부가 우리 국민들의 중국 방문시 무비자 입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부정적 입장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오는 5월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추진돼온 ‘한시적 무비자 입국’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임.
- 외교 소식통은 15일 “지난해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정운찬 총리가 만찬석상을 이용해 무비자 입국을 제의했고 이후 연초부터 외교채널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확인했음.
- 이 소식통은 그러나 “중국측은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아직까지 객관적인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며 무비자 입국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중국측을 상대로 계속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음.
- 중국이 현재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중국 화교가 다수 포진하고 있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국인 무비자 입국의 대가로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선진국 또는 한국 입국경험이 2~3차례 있는 관광객 ▲공무·관광여권



소지자 등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의해 놓은 상태임.

- 정부는 중국측의 부정적 입장표명에 따라 상하이 엑스포 기간인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중국측의 난색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외교 소식통은 “무비자 입국 추진을 위한 물리적 준비절차 등을 감안할 때 5월 엑스포 때의 한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은 17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을 방문,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무비자 입국 문제가 논의될 수 있을 지 주목됨.

#### 다. 한·일 관계

##### ● “한·일, 황장엽씨 내달 방일 협의”(3/21)

- 한국과 일본 정부가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일본 방문을 4월에 성사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음. 황씨의 방일이 실현될 경우 그로부터 북한 체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회에도 참고인으로 출석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나카이 히로시(中井 洽) 공안위원장 겸 납치문제담당상은 작년 10월 한국을 방문해 한국 정부에 황씨의 방일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 한국 정부는 당시 “본인의 의사를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황씨의 경호 면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

##### ● “한·중·일 5월말 제주 정상회담 추진”(3/19)

-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이 5월말 제주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최종 조정하고 있다고 일본의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9일 베이징발로 보도했음.
- 이 신문은 제주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한국은 이명박 대통령,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일본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상회담의 안건은 북한 핵 문제와 한중일 3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연구 등이 될 것으로 이 신문은 예상했음.

##### ● 주호영, 日국가전략상과 교류협력차 방일(3/16)

- 주호영 특임장관이 17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함. 주 장관은 방일 기간에 일본의 특임장관격인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국가전략상과 오오시마 아츠시(大島敦).코우헤이 오오즈카(大塚耕平) 부상 등을 만나 양국간 교류·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
- 특히 주 장관의 이번 출장은 11년 만에 특임장관실이 개청된 이후 우리와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의 특임장관 운영 사례를 파악



하고 협력하기 위한 차원임.

- 일본의 국가 전략실은 총리 직속 기관으로 지난해 하토야마 정권의 '9.18 내각'에서 처음으로 내각관방에 설치됐으며, 새 재정의 골격 마련과 경제운영의 기본방침, 총리로부터 특명을 받는 업무를 맡고 있다고 특임장관실은 전했다.
- 주 장관은 이어 오사카 재일 거류민단을 방문하고, 일본의 차세대 리더를 교육하는 마쓰시다정경숙(松下政經塾)을 시찰하는 한편, 일본 특파원과와의 간담회도 가질 예정임.
-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16일 “주 장관은 이번 방문에서 향후 양국간 정무관계 장관급 간 상호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 양산시의회, 日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 채택(3/16)

- 경남 양산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정부 주요 부처와 주한 일본대사관 등에 보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 김일권 의원이 대표 발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의안에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반인륜적 범죄행위의 당시자로서 사죄와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책임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음.
- 김 의원은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의 복지와 명예회복을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그 분들의 한을 풀어 드려야 한다”며 “정부는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외교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 정부 “日에 ‘군대위안부’ 법적책임 추궁”(3/15)

- 정부는 과거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있다고 외교통상부가 15일 밝혔다. 김영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군대위안부와 사할린 한인, 원폭피해자 문제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군대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는 아직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대해 계속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사할린 한인과 원폭피해자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고 한·일 양국이 과거사 현안 해결 차원에서 끈질기게 협의해 왔다”면서 “군대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 조성을 시도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 강영훈 외교부 일본과장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 담화가 발표된 이후 일본이 아시아여성기금을 만들었다가 무산된 경위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강 과장은 또 “사할린한인의 경우 1990년대 후반부터 추진 중인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사업, 모국방문사업 등에 일본이 나름대로 성의



를 많이 보였고 원폭피해자의 경우 법적으로 배상하는 형태는 아니었지만 노태우 정부 때 40억엔을 지원한 적이 있다”면서 “이 두 사안은 대부분 해결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 한편, 가수 김장훈씨나 서경덕 교수가 뉴욕에서 펼치는 독도 광고캠페인이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김 대변인은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독도 영유권에 해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런 캠페인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 한·일 치안총수 G20 경비 협력 논의(3/15)

- 강희락 경찰청장은 15일 오전 안도 다카하루(安藤隆春) 일본 경찰청 장관을 초청해 한일 치안총수 회담을 하고 양국 경찰업무 협력 협의회에 서명했다.
- 일본 경찰청 장관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2002년 한·일 월드컵 직전에 대회 경비대책 논의를 위해 방한한 이후 두 번째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치안총수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와 요코하마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테러와 과격집회·시위를 주도하는 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는 등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또 전화금융사기나 조직폭력범죄 등 양국 경찰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중요 사건의 수사공조 강화, 고위급 실무 회의 정기 개최 등을 약속했다.
- 동북아시아의 국제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한·중·일 치안협약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 라. 미·중 관계

#### ● <中언론 “환율압박은 美 모노드라마”>(3/18)

- 중국 언론이 유럽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미국의 위안화 환율 압박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18일 ‘위안화 압력은 미국의 모노드라마(독백극)’란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에서 환율 절상 압력이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에서 유럽과 유엔기구가 미국의 움직임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데이비드 밀리반드 영국 외무장관이 16일 베이징에서 윈자바오(溫家寶) 총리와 만나 “영국은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중국에 환율 절상 압력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도 공개적으로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다.
- 세르즈 아부 주중 EU 대사는 17일 베이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확성기를 들이대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아부 대사는 “환율은 내외부적인 것을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 라면서 “국제무역의 공영을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국제회의 무대에서 건설적인 각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유엔의 싱크탱크인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미국과 달리 중국의 외환 정책을 지지하고 나서 주목받고 있음. UNCTAD는 16일 정책 브리핑을 통해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시장에 그대로 맡길 경우 국제 경제에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음.
- UNCTAD는 또 중국이 경제 위기를 가라앉히기 위해 “다른 어떤 신흥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내수를 촉진했다”면서 그로 인해 “임금이 두 자릿수 상승한데 자극받아” 개인 소비가 지난해 9%가량 증가했다고 밝혔음.
- 중국 전문가들도 위안화 절상 압력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베이징대 국가발전연구원의 황이핑(黃益平) 교수는 “세계 경제의 불균형 문제는 환율만으로 해결할 수 없고 각국의 경제구조 조정 및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인다면 양국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위안화 환율 문제를 거론한 뒤 의원들이 재무장관과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강력대응을 촉구하는가 하면 제재 조치를 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 압력을 가속화하고 있음.
- 그러나 신문은 세계은행이 분기보고서에서 “중국이 위안화를 평가 절상하면 인플레이 압력을 줄이고 경제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밝힌 내용은 간단히 언급했지만 다른 국제기구의 환율 절상 촉구 움직임은 언급하지 않았음.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17일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중국 위안화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며 절상을 촉구한 바 있음.

#### ● <中, 美에 ‘직격탄’..‘우리도 할말 많다’>(3/18)

- 최근 미국과 각종 민감한 이슈로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이 미국에 관계 복원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각종 이슈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양국 관계 현안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중국의 입장을 밝혔음. 우선 그는 미국 하원이 파룬궁(法輪功) 수련자에 대한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음.
- 친 대변인은 “결의안은 사실을 왜곡하고 흑백을 전도하고 있다”면서 “중국 정부의 법에 의한 처리를 이유 없이 비난하는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룬궁은 반인륜적이고



- 비과학적이며 반사회적인 사교(邪教)집단으로, 사교집단을 통제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가라면 누구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 의회가 파룬궁의 본질을 직시하고 파룬궁에 대한 지지와 선동을 중단해 스스로의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 미국 하원은 412명의 의원이 찬성한 결의안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에 대한 박해, 협박, 투옥, 고문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중국에 촉구했음. 친 대변인은 또 이날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에 먼저 나설 것을 강하게 촉구했음.
  - 그는 이날 존 헨츠먼 주중 미국대사가 칭화(淸華)대에서 “나는 양국 관계에서 청명한 하늘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신한다”고 한 것과 관련, “우리도 양국관계에 맑은 하늘과 따뜻한 햇볕이 나타나길 바라지만 대사가 양국 관계의 아름다운 미래를 원한다면 미국이 관계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3대 공동성명의 원칙에 따라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고 민감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양국 관계가 건강한 발전의 궤도로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또 헨츠먼 대사가 이날 위안화 환율 문제와 관련, 향후 몇 주 안에 중요한 협상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우리는 더 많은 (위안화) 환율 유연성을 보길 원한다”며 환율 절상을 촉구한데 대해서도 반박했음. 그는 “환율 문제가 양국간 무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아니다”라며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이 생산을 중단한 것으로, 중국이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라도 공급받아야 하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이어 “본국의 수출 증대를 위해 자국의 환율은 낮추면서 타국의 환율 절상을 요구하고 무역장벽 등으로 타국의 수출을 줄이려는 행위는 불공평하다”면서 “이는 양국 경제무역 관계에 해가 되며 금융위기가 막 회복되는 결정적인 상황에서 세계 무역에도 해를 끼친다”고 비판했음. 그는 “이는 보호무역주의의 전형적인 나쁜 사례로 세계 경제회복과 장기적이고 균형적이며 안정적인 발전에 불리하다”고 말했다.
  - 미.중 양국은 대(對)대만 무기판매 문제와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접견 문제, 구글 사태, 위안화 환율 절상문제, 무역마찰 등 각종 현안으로 갈등을 겪어 왔으며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의 이달 초 방중 이후에도 관계는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있음.

### ● <후진타오, 워싱턴 행정상회의 참석할듯>(3/17)

-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내달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참석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분석들이 나오고 있음.
-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는 17일 중국 외교전문가들과 외국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후 주석이 미국 의회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등 새로 대두된 양국간 갈등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12~13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음.

-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의 니우쥘(牛軍) 교수는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가 미국과 중국간 양자회담이 아니라 다자회담 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후 주석이 이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음. 니우 교수는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는 매우 중요한 이벤트임. 만일 중국이 불참하면 국익에도 해가 된다”면서 “중국은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음.
-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이어 4월 15일부터 16일까지 브라질에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개국이 참여하는 제2차 브릭스(BRICs) 정상회의가 예정돼 있는 점도 후 주석의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음. 브라질의 한 외교관은 16일 “후 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브라질을 공식 방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음. 물론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나 브릭스 정상회의에 후 주석 대신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나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참석할 수도 있음.
- 그러나 원 총리나 시 부주석의 경우 두 정상회의를 전후해 각각 동남아와 유럽국가들을 방문할 일정이 잡혀 있는 점도 후 주석이 직접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튀쿠 파이자샤 인도네시아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주 원 총리가 4월 중 동남아 국가들을 순방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중국 외교부는 16일 시 부주석이 러시아를 비롯한 유럽국가들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물론 중국의 외교전문가들은 후 주석이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더라도 양자간 갈등요소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공식방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쑨저(孫哲) 칭화(淸華)대학 중미관계 연구센터 주임은 “후 주석이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더라도 후 주석이 지난해 11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약속한 미국 공식방문은 금년 상반기에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음.
- 이 같은 상황에서 후 주석의 핵 안보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달라이 라마 면담,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미국의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미중 관계의 향방을 엿볼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고 있음.
- 앞서 SCMP는 지난 4일에는 중국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중국측에 워싱턴 핵 안보정상회의에 후 주석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중국측은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면서 후 주석의 핵 안보정상회의 불참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음.



### ● 美의회, 中 환율정책에 강력 대응 촉구(3/16)

-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위안화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고 있다는 미국 측 비난을 일축하자 미국 의회 의원들이 15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중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중국 위안화 환율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마찰이 고조되는 양상임. 미 의회 의원 130명은 이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과 게리 로크 상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보내 중국의 환율정책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음.
- 이들은 서한에서 “중국의 환율조작에 따른 충격이 미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과장돼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위안화의 가치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룰을 어겨가며 외국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사”라고 비난했음.
- 서한은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키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체의 역량에 상처를 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서한은 특히 재무부에 다음달 15일 발표하는 환율조작국 리스트에 중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으며, 상무부에는 환율을 조작하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선별적으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을 촉구했음. 서한에 서명한 의원들은 오바마 행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및 여타 국가들과 협력해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압박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제소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번 서한은 중국의 원 총리가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직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미국, 유럽의 대(對)중국 수출현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 “위안화가 결코 평가절하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데 대한 대응으로 여겨짐.
- 이와 함께 미 하원은 중국 환율정책의 영향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이달 하순에 열기로 결정했음.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은 세입위에서 오는 24일 중국 환율정책의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과 국제 경제 회복, 미국의 일자리 창출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음.
- 레빈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는 현황 분석과 점검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의회가 위안화 절상압력과 관련, 미 행정부에 구체적인 조치들을 제시할 지 주목됨. 미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위안화가 실제 가치보다 25~40% 평가절하돼 미국의 대중국 무역역조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해왔음.

### ● 장예수이 中 주미대사 부임(3/16)

- 중국의 장예수이(張業濬.56) 신임 주미대사가 워싱턴에 부임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16일 보도했음. 장 대사는 미국



의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결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달라이라마 면담, 중국의 인터넷 검열 문제 등으로 악화된 양자 관계를 다루게 됨.

- 1979년 미·중 외교관계 수립 이후 9번째로 주미대사를 맡게 된 장 대사는 후베이(湖北)성 출신의 전문 외교관임. 그는 5년간 유럽과 외교정책연구 분야 담당 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8년 9월부터 왕광야(王光亞) 전 대사의 뒤를 이어 주 유엔대사를 맡아왔음.
- 양제츠 외교부장과 전임자인 리자오싱(李肇星)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변인도 거쳐간 주미대사는 중국 외교라인의 핵심 요직으로 꼽힘. 장 대사가 주미대사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주 유엔대사는 리바오둥(李保東) 제네바 주재 유엔대사가 맡게 됨.

#### 마. 미·일 관계

##### ● 하토야마 “후텐마 오키나와 밖 이전 어렵다”(3/20)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주일 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을 오키나와(沖繩)현 밖으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고 현지언론이 20일 전했다. 하토야마 총리는 전날 밤 기자들에게 후텐마 비행장 이전과 관련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고충을 토로했음. 그는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주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고 싶다고 강조해왔음.
- 일본 내각에서 주무 각료인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후텐마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이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임.
- 오카다 외상은 “민주당 선거공약이나 연립정권 합의문에 후텐마를 오키나와현 밖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는 없다”고 말했다. 기타자와 방위상은 “후텐마를 받아들일겠다고 하는 곳 중에서 이전할만한 적격지는 없다”고 밝혔다.
- 일본 정부는 후텐마비행장의 이전 후보지로 오키나와현 미군 캠프 슈워브 육상부와 미군 화이트비치 기지 앞바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오는 23일 외상과 방위상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정부안을 결정한 뒤 미국과 오키나와현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협의에 나설 계획임.

##### ● 日외상, 美국방과 28일 후텐마 협의(3/18)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오키나와(沖繩) 주일미군 후텐마(普天間)비행장 이전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이달 말 회담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이 18일 보도했음. 오카다 외상은 이달 29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8개국(G8)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28일 워싱턴에 들러 게이츠



장관과 회담할 예정임. 그는 게이츠 장관에게 후텐마비행장을 같은 오키나와현내 캠프슈워브 육상부나 화이트비치 미 기지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방침임.

- 오카다 외상은 주요 8개국 외무장관 회의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도 만나 양국 현안을 논의함.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이날 후텐마 문제와 관련, “3월중 정부안을 정리해 이를 토대로 미국 정부와 오키나와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편 제임스 콘웨이 미 해병대 사령관은 17일 “후텐마비행장 이전 문제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당연히 현상 유지”라면서 “현재의 비행장을 거점으로 작전을 수행하고 부대를 전개해서 지역 안전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음. 미군 고위관계자가 경우에 따라 후텐마비행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임.

#### ● 日외상 “유사시 핵반입 용인할수도”(3/17)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유사시 미군의 핵 반입을 허용할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음. 오카다 외상은 17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비핵 3원칙에 저촉되더라도 미군의 핵 반입을 허용하는 일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말했음.
- 그는 “긴급사태가 발생해 핵 반입이나 핵 탑재 선박 또는 항공기의 기항을 용인하지 않을 경우 일본의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정권이 명운을 걸고 결단을 내려 국민에게 설명해야할 것”이라고 밝혔음. 오카다 외상은 그러나 “하토야마 내각은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그의 이런 발언은 미국의 핵 우산에 의한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의 안전보장을 확보하고 미·일 관계를 유지해나가겠다는 뜻으로 해석됨. 비핵 3원칙은 일본 정부가 1968년부터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고 선언한 것으로 사실상 일본의 국시임.

#### ● 美의회·행정부, 日농산물시장 개방확대 요구(3/17)

- 미국 의회와 행정부가 16일 일본이 쇠고기 등 농산물 시장 개방을 확대해야 한다고 일제히 요구했음. 미 의회 민주·공화 양당 상원 중진 의원들인 맥스 보커스 재무위원회 위원장과 찰스 그래스리 재무위 간사는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한 조치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일본에 쇠고기 수입개방 확대를 주문했음.
- 보커스와 그래스리 의원은 후지사키 이치로(藤崎一郎) 주미 일본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일 경제관계가 이런 중대한 우려가 해소돼 개선되길 기대한다”며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해제가 양국 경제관계 개선의 선결과제를 강조했다.
- 이들은 특히 “미국인 수백만명이 모든 연령대의 쇠고기를 매일 먹고



있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중대한 의혹이 있을 수 없다”면서 “우리는 일본이 과학에 기초한 쇠고기 통상정책을 통해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시장을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이들은 또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무역장벽은 몬태나와 아이오와 주(州) 축산과 쇠고기 생산업자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가 2006년 수입을 재개했음. 일본은 2003년 전만 해도 미국산 축산물의 최대 수출 시장이었음.
- 보크스와 그래슬리 의원은 일본의 우편국과 우편사업 회사들이 보험과 은행, 특송업무에서 다른 민간 경쟁업체들보다 특혜를 받고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시했음. 이들은 “미국과 다른 민간업체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법을 통해 이런 우려를 해소해 주길 촉구한다”고 말했음.
- 마이크 조한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약 10일전 후지사키 일본대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일본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규제를 뻔뻔스런 불공정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음.
- 이와 함께 톰 빌색 미 농무장관은 내달 5~9일로 예정된 일본 방문 목적과 관련, “나의 이번 방문의 임무는 시장을 개방하도록 계속해서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미 농무부의 한 관계자는 또 빌색 농무장관의 이번 방일은 일본의 곡물과 과일 시장 개방을 확대하는데도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전했다.

### ● “日, 외교문서 30년 후 자동공개”(3/16)

- 과거 자민당 정부의 미·일 핵 밀약 등 뒷거래 외교를 파헤친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작성후 30년이 지난 외교 문서를 자동 공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음.
-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작성 후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는 원칙적으로 자동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확정했음. 외교 문서를 예외적으로 비공개하는 경우엔 문서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이유를 설명하도록 의무화해 담당 부서의 재량을 최대한 배제하기로 했음. 또 중요문서의 파기 등 부적절한 문서관리에 대해서는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 일본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1976년부터 30년이 경과한 외교문서를 공개하기 시작했지만 해당 부서의 자체 판단으로 ‘국익에 손해가 된다’는 이유 등을 들어 공개하지 않은 문서가 많은 실정임. 현재 30년이 지났지만 공개 여부 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문서는 4만6천건에 달하고 있음.



## 바. 미·러 관계

### ● 러시아, 이란·무기감축서 美와 협력 시사(3/20)

- 러시아가 핵개발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19일(현지시간) 전달했음. 미국과 진행 중인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1)을 대체할 새로운 후속 협정도 4월 중 체결될 것으로 보임.
-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은 유리 유샤코프 러시아 총리실 부실장의 말을 인용해 푸틴 총리가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음.
-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제재안에 동의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쉽게 말해 대(對) 이란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력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푸틴 총리는 “다만 이런 이슈를 풀어가는 데 제재가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다”고 언급하며, 발언 수위를 조절했음. 푸틴 총리는 클린턴 장관에게 러시아가 17년간 세계 무역기구(WTO) 가입을 원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 미국이 도와달라고 촉구했음.
- 그는 러시아 기업에 대한 미국의 제재 때문에 대미 무역 규모가 급감하고 있다며 러시아 기업의 미국 진출을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음. 유샤코프 부실장은 전략무기감축협정 후속협정이 언제 체결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4월”이라고 답변했음. 그는 협정 체결 일자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협정이 유럽에서 조인될 수 있다고 부연했음.

## 사. 중·러 관계

### ● 시진핑 “중·러 접경지역, 경협 전초기지”(3/21)

- 5개국 순방길에 나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부주석이 첫 방문지인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총 16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21일 현지언론이 밝혔음.
- 시진핑 부주석은 세르게이 다르킨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주(연해주) 주지사와 만나 양국 및 양지역간 경제 및 교류협력 확대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총 16억달러 규모의 경제협력 협정을 체결했음. 중·러 경제협력협정은 경제·기술·에너지·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양국 정부 및 기업계 대표들이 서명했음.
- 시 부주석은 특히 20일 오후 열린 중·러 협력강화를 위한 심포지엄에 참석, “러시아 극동 및 중국의 북부국경 등 양국 접경지역은 중요한 무역 파트너로서 뿐 아니라 양국을 전략적 협력파트너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21일 오전 극동국립대학교 공자대학과 2012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건설 중인 블라디보



스토크 금각만 교량 건설현장 등을 둘러봤음. 이날 러시아 제2도시인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한 시 부주석은 24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등과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어의 해’ 개막식에 참석함.

### ● 中 시진핑, 러시아-북유럽 순방 나서(3/20)

-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유력한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20일 러시아와 북유럽 순방길에 올랐음.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부주석은 이날 출국해 30일까지 11일간 러시아를 비롯해 벨라루스, 핀란드, 스웨덴을 잇따라 공식 방문함.
-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의 초청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시 부주석은 우선 블라디보스토크를 먼저 찾아 21일까지 머물면서 중·러 국경 무역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임. 시 부주석은 24일까지 러시아에 머물면서 메드베데프 대통령, 푸틴 총리 등과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중국어의 해’ 개막식에도 참석할 예정임.
- 그는 이어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프레드릭 라인펠트 스웨덴 총리의 초청으로 이들 3개국을 24~30일까지 방문한 뒤 귀국함.
-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시 부주석의 4개국 순방은 매우 중요한 외교 활동으로서 중국이 4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증명한다”면서 “이번 순방이 각국과 중국과의 협력관계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음.

### 아. 기타

#### ● 하토야마 “5월까지 東亞공동체안 정리”(3/19)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5월말까지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과제를 정리하겠다고 밝혔음. 19일 교도통신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일본을 개방한다”는 생각으로 폭넓은 분야에서 과제를 추진하자”며 히라노 히로후미(平野博文) 관방장관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각국과의 교류 심화 방안을 검토해 6월에 정리할 예정인 ‘신성장전략’에 반영하라고 지시했음.
-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의 골간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경제 연계 추진, 기후변동 등 환경문제 대처, 방재(防災)협력 등 생명을 지키기 위한 협력, 동중국해를 ‘우애의 바다’를 만들기 위한 해적 대책이나 해난구조 협력 등을 거론했음.
- 히라노 장관은 내각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문화나 사람, 물건, 돈의 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참가국이)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음.



### ● 유엔, 北인권 최종 검토보고서 진통끝 채택(3/19)

-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18일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최종 보고서를 진통 끝에 채택했음.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유엔 유럽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52개 회원국이 권고한 169개 항목 가운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의 방북 조사를 허용하라는 권고 등 50개 항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음.
-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7일 실무그룹 검토에서 나온 권고에 대해 이틀 후 50개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고, 117개 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통보했음. 북한이 거부한 50개 항목에는 특별보고관 방북을 비롯해 사형제 유보 및 공개처형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 처벌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의 국내 및 국외 여행의 자유 보장, 아동에 대한 군사훈련 중단 등이 포함돼 있음.
-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리철 대사는 이날 “배격한 50개 권고들은 우리의 국가사회제도에 대한 체질화된 거부감과 적대감으로부터 출발해 제도 전복, 영상(이미지) 훼손 등 인권과 인연 없는 목적을 추구하는 데 초점이 있다”며 “유엔 인권무대에서 강압 채택된 결의와 그에 따라 나온 특별보고관은 인정하지 않으며 단호히 배격한다”고 말했다.
- 북한은 검토 대상 117개 권고 항목에 대해 북한의 경제위기에 따른 생활고와 취약계층 인권 개선, 국제인권협약 의무 이행 및 가입, 국제기구의 인권문제에 관한 기술적 지원 수용, 이산가족 상봉 및 생사 확인 노력 등 분야별로 포괄적인 답변을 했음. 하지만, 세부 항목별 수용 여부에 대한 답변이나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발언은 나오지 않았음.
- 북한이 세부 항목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자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프랑스 등은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고,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 등 비정부기구(NGO) 등도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 정부의 구체적인 노력을 촉구했음.
- 특히 북한 인권정례검토의 3개 간사국 중 하나인 노르웨이는 의장이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기 직전 발언을 신청해 “북한이 (검토대상 항목 중)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거부할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했음.
- 이 때문에 회의가 7~8분 가량 정회되는 소동을 빚었고, 이후 재개된 회의에서 프랑스와 쿠바 등의 추가 발언이 있는 뒤에 최종 보고서 채택이 이뤄졌음.

### ● “北, 옐로케이크 45t 이란 전달 심각한 우려”(3/17)

- 북한이 이란에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료로 사용될 ‘옐로케이크’(yellow-cake) 45t을 시리아와 터키를 통해 우회전달한 것은 심각한 우려라고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가 지적했음.



- 미국 몬테레이국제학연구소 비확산센터의 레너드 스펙터 부소장은 16일 센터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을 통해 이란과 북한간의 핵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2007년 이스라엘의 시리아 원자로 폭격전 농축되지 않은 소위 옐로케이크 45t을 시리아에 전달했고, 북한은 터키를 거쳐 이를 이란에 추후에 전달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면서 “북한이 이란의 핵 추구 노력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는 훨씬 심각한 것”이라고 우려를 제기했음.
  - 일본의 교도통신은 최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지난해 여름 북한으로부터 정제된 우라늄 광석 45t을 시리아를 거쳐 밀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음.
  - 옐로케이크로도 불리는 우라늄 광석은 우라늄 원광석에서 분리된 중간생산물로, 노란 분말의 일종의 정제된 우라늄임. 스펙터 부소장은 “북한과 시리아를 통한 45t의 우라늄은 무기급으로 농축될 경우 수개의 핵무기를 만들기에 충분한 양”이라면서 “북한과 이란간의 핵 결합은 국제적 비확산 노력을 증대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음.
  - 그는 “북한이 이란과 똑같은 기술을 사용해 우라늄 농축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이란이 북한의 프로그램(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성공을 지원하는 호의를 되돌려 줄 수 있다”고 전망했음.
  - 그는 “북한과 이란이 각각의 핵 활동을 계속 함으로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관련 사항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이제 북한과 이란은 안보리의 요구를 우회하기 위해 상호간의 지원을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이와 관련, 그는 “북한이 핵무기에 필요한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시리아의 원자로 건설을 도와준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북한과 시리아, 이란간의 이란 핵 능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공동협력 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공개된 것은 없었다”고 전했다. 스펙터 부소장은 미 에너지부에서 군축 및 비확산을 담당해 온 고위 관료출신임.
- **日조선학교 무상화 요구 학부모 거리시위(3/16)**
- 수백명의 재일동포 학부모들이 16일 도쿄에서 고등학교 과정 무상화 대상에 조선학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음.
  - 일본 중의원은 이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계 조선학교도 그 대상에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이에 약 300명의 재일동포 여성들은 도쿄 시내에서 어린 자녀의 손을 잡거나 유모차를 끌고 나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정부가 자신들의 자녀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음.
  - 시위대의 한 여성은 “어머니들의 힘으로 정부가 우리 학교(조선학교)를 학비 무상화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외쳤음. 또 다른 여성은 “우리는 일본에서 태어났고 앞으로도 이곳에서 살 것”이라면



서 “우리는 지금껏 일본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을 받아왔지만 우리 아이들까지 같은 길을 걷게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 일본에서 고교 무상화 정책이 내달 1일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보수층을 중심으로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진전이 없고, 지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 남아공 “월드컵 공사장에 북한인 없다”(3/16)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월드컵 경기장 건설 현장에 북한 근로 인력이 대거 투입됐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남아공 관계자들이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 하네스버그 사커시티 스타디움 건설 시행사인 그리나커-LTA사의 마이크 무디 이사는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커시티 스타디움 건설 과정에서 단 한 명의 북한인도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무디 이사는 “일부 외국인 인력이 동원되기는 했지만 북한 국적자는 전혀 없었다”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 넬스푸르트의 음봄벨라 스타디움 건설 책임자인 디세르 모할레도는 “북한 노무자들을 스타디움 건설 현장에 투입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남아공 월드컵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한국 언론에 북한인이 월드컵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보도됐다는데,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 앞서 한국의 일부 언론은 정부 당국자를 인용, 북한이 외화벌이를 위해 1천여 명의 근로자를 남아공 월드컵 건설현장에 투입했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월드컵 주경기장인 사커시티 스타디움과 북한이 코트디부아르와 조별 리그전을 치를 음봄벨라 스타디움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 현지 외교 소식통은 “흑인도 일자리가 모자라는 판국에 외국에서 근로 인력을 수입한다는 것은 난센스”고 말했다.
- 그는 또 보도에서 “북한 노무자들이 현재도 일하고 있다”며 언급된 음봄벨라 경기장은 이미 완공된 상태며, 사커시티 경기장의 경우 현재 조경 공사, 주차장 공사 등 마무리 공사만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아공은 공식 실업률이 25%에 달할 만큼 실업 문제가 심각하며, 올해 들어 월드컵 경기장 건설 공사가 속속 마무리되면서 건설 근로자 실업 문제가 재차 부각되고 있음.